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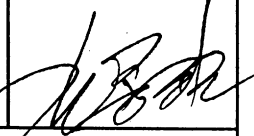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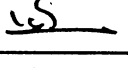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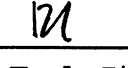


# 국무조정실

우 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/ 전화 (02) 734-9345 / 전송 (02) 720-1162

문서번호	국무규제 05090 - 90	취급		국무조정실장	국무총리
시행일자	1998. 5. 11.(년)	보존			
발음 받는 곳	참조	조정관			
참조		심의관		기획심의관	
		부이사관			
		기안	류충렬		협조

제 목 『행정규제 등록업무 처리지침』 시달(국무총리지시 제1998 - 10 호)

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 각 중앙행정기관이 하여야 될 소관규제의 등록과 관련하여 『행정규제등록업무지침』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규제의 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## 1. 등록대상규제

- 법령(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)과 그 법령에 근거하는 “고시등”(훈령, 예규, 고시, 공고)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령이 정하는 행정규제를 파악하여 등록함
- 법령에 근거한 세칙·요령·규정·지침 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2항에 의한 “고시등”의 형태가 아닌 하위규정의 규제도 등록하여야 하며
  - 아울러 '98.12월말까지 “고시등”의 형태로 변경하여야 함

## 2. 규제의 등록단위

- 등록대상이 되는 규제가 상위법령에 의해 하위규정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 하위규정상의 규제를 등록단위로 함
  - 다만, 하위규정에서 규제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·절차만 정한 경우 상위규정상의 규제를 등록단위로 함

- 규제의 근거규정이 다른 경우 유사·동일규제라도 별개의 등록단위가 됨
- 동일법령상의 규제를 복수의 부처에서 처리하면서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 각각의 규제로 등록함

### 3. 등록 소관규제의 범위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“법령등”에 규정된 규제를 소관규제로 파악·등록함
  - 법령, “고시등”을 제안·운영하는 부처가 소관부처가 되며, 의원입법 법률의 경우 시행령·규칙 등 하위법령의 제안부처가 소관부처가 됨
- 하위규정 제정 부처가 복수(공동부령)이거나 동일법률에 하위규정을 부처별로 달리할 경우 해당 부처가 하위규정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부분까지 등록토록 하고
  -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법령은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관련이 더 많은 부처가 등록토록 함

### 4. 등록방법·기한

- 행정규제의 등록은 이를 전산 Data Base화 하여 PC통신 등을 이용 국민에게 공표하게 되므로
  - 기존규제는 규제등록지침에 따라 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규제등록서 (1부 출력)와 함께 '98.8.31까지 등록토록 함
- 등록기간 이후 신설·변동·폐지되는 규제는 관련법령 등이 공표·발령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함

### 5. 등록누락 방지 및 미등록 규제에 대한 조치

-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등록이 누락되는 규제가 없도록 소관규제를 정확히 파악 등록토록 조치하고
- '98.9.1 이후 미등록된 규제가 발견될 시는 당해규제를 폐지하는 등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여야 함

## 6.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업무

-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·규칙에 규정된 행정규제 등록 및 공표 업무와 관련, 불임의 「행정규제 등록업무 처리지침」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함.

불임 「행정규제 등록업무 처리지침」 1부. 끝.



**국무총리**

받는 곳 가(13~20, 31~47, 51~55, 57~67)

# 국무조정실

우 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/ 전화 (02) 734-9345 / 전송 (02) 720-1162

문서번호	국무규제 05090 - 90	선 결			지		
시행일자	1998. 5 . 11 .(    년)	접	일 자		시		
반	음	수	번 호		결		
참	조	처 리 과			재		
제	목	담 당 자			공		
					람		

제 목 『행정규제 등록업무 처리지침』시달(국무총리지시 제1998 - 70 호)

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 각 중앙행정기관이 하여야 될 소관규제의 등록과 관련하여 『행정규제등록업무지침』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규제의 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## 1. 등록대상규제

○ 법령(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)과 그 법령에 근거하는 “고시등”(훈령, 예규, 고시, 공고)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령이 정하는 행정규제를 파악하여 등록함

○ 법령에 근거한 세칙·요령·규정·지침 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2항에 의한 “고시등”의 형태가 아닌 하위규정의 규제도 등록하여야 하며

- 아울러 '98.12월말까지 “고시등”의 형태로 변경하여야 함

## 2. 규제의 등록단위

○ 등록대상이 되는 규제가 상위법령에 의해 하위규정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 하위규정상의 규제를 등록단위로 함

- 다만, 하위규정에서 규제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·절차만 정한 경우 상위규정상의 규제를 등록단위로 함

- 규제의 근거규정이 다른 경우 유사·동일규제라도 별개의 등록단위가 됨
- 동일법령상의 규제를 복수의 부처에서 처리하면서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 각각의 규제로 등록함

### 3. 등록 소관규제의 범위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“법령등”에 규정된 규제를 소관규제로 파악·등록함
  - 법령, “고시등”을 제·개정·운영하는 부처가 소관부처가 되며, 의원입법 법률의 경우 시행령·규칙 등 하위법령의 제·개정부처가 소관부처가 됨
- 하위규정 제·개정 부처가 복수(공동부령)이거나 동일법률에 하위규정을 부처별로 달리할 경우 해당 부처가 하위규정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부분까지 등록토록 하고
  -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법령은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관련이 더 많은 부처가 등록토록 함

### 4. 등록방법·기한

- 행정규제의 등록은 이를 전산 Data Base화 하여 PC통신 등을 이용 국민에게 공표하게 되므로
  - 기존규제는 규제등록지침에 따라 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규제등록서(1부 출력)와 함께 '98.8.31까지 등록토록 함
- 등록기간 이후 신설·변동·폐지되는 규제는 관련법령 등이 공표·발령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함

### 5. 등록누락 방지 및 미등록 규제에 대한 조치

-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등록이 누락되는 규제가 없도록 소관규제를 정확히 파악 등록토록 조치하고
- '98.9.1 이후 미등록된 규제가 발견될 시는 당해규제를 폐지하는 등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여야 함

6.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업무

-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·규칙에 규정된 행정규제 등록 및 공표 업무와 관련, 붙임의 『행정규제 등록업무 처리지침』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함.

붙임 『행정규제 등록업무 처리지침』 1부. 끝.

**국무총리**

받는 곳 가(13~20, 31~47, 51~55, 58~67)

# 行政規制 影響分析 및 自體審查 業務指針

'98. 5.

規制改革委員會  
(國 務 調 整 室)

## **= 차 례 =**

### **I . 新設(強化)規制에 대한 事前審査制度 概要**

1. 審査制度의 內容 및 根據
2. 新設(強化)規制의 審査業務 節次圖

### **II . 規制影響分析 指針**

1. 規制影響分析制度 概要
2. 規制影響分析 指針
3. 規制影響 分析書 作成要領
4. 評價要素別 規制影響 分析要領<별첨함>

### **III . 部處別 自體審査 指針**

1. 自體審査機構 構成, 運營
2. 自體審査 節次
3. 自體審査意見書 作成・提出

### **※ 關聯 書式**

1. 規制影響分析書



# I. 新設(強化)規制에 대한 事前審査制度 概要

## <目 的>

-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('98.3.1)에 따라 '98.6.1부터 신설·강화되는 행정규제는 사전 의견수렴, 영향분석, 자체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(심사절차 준수)
- 자체 및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, 타당성, 대체수단 검토, 존속기간 등을 검토하여(규제영향분석 등)
- ⇒ 불필요한 규제 신설(강화)를 초기단계에서 부터 억제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유도

## 1. 審査制度의 内容 및 根據(법제2장)

### 가. 부처별 자체심사의 내실화

#### (1) 의견수렴 절차

- 규제 신설(강화)시에는 공청회,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·민간단체·이해관계인·연구기관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함(법 제9조)

\* 공청회, 행정상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준수(시행령 제8조)

#### (2) 규제의 영향분석제도

- 규제 신설·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시에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분석결과를 자체심사토록 함(법 제7조)
- 규제영향 평가요소 : 8요소 19개항

### (3) 자체심사 절차 도입

-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, 규제의 대상·범위·방법과 그 타당성을 자체심사토록 함(법제7조②항)

### (4) 규제일몰(Sun set)도입

- 규제를 신설(강화)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(법 제8조)

### (5) 긴급한 규제에 대한 예외

-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자체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이 가능  
(법 제13조)

## 나. 중앙(규제개혁위원회) 심사제도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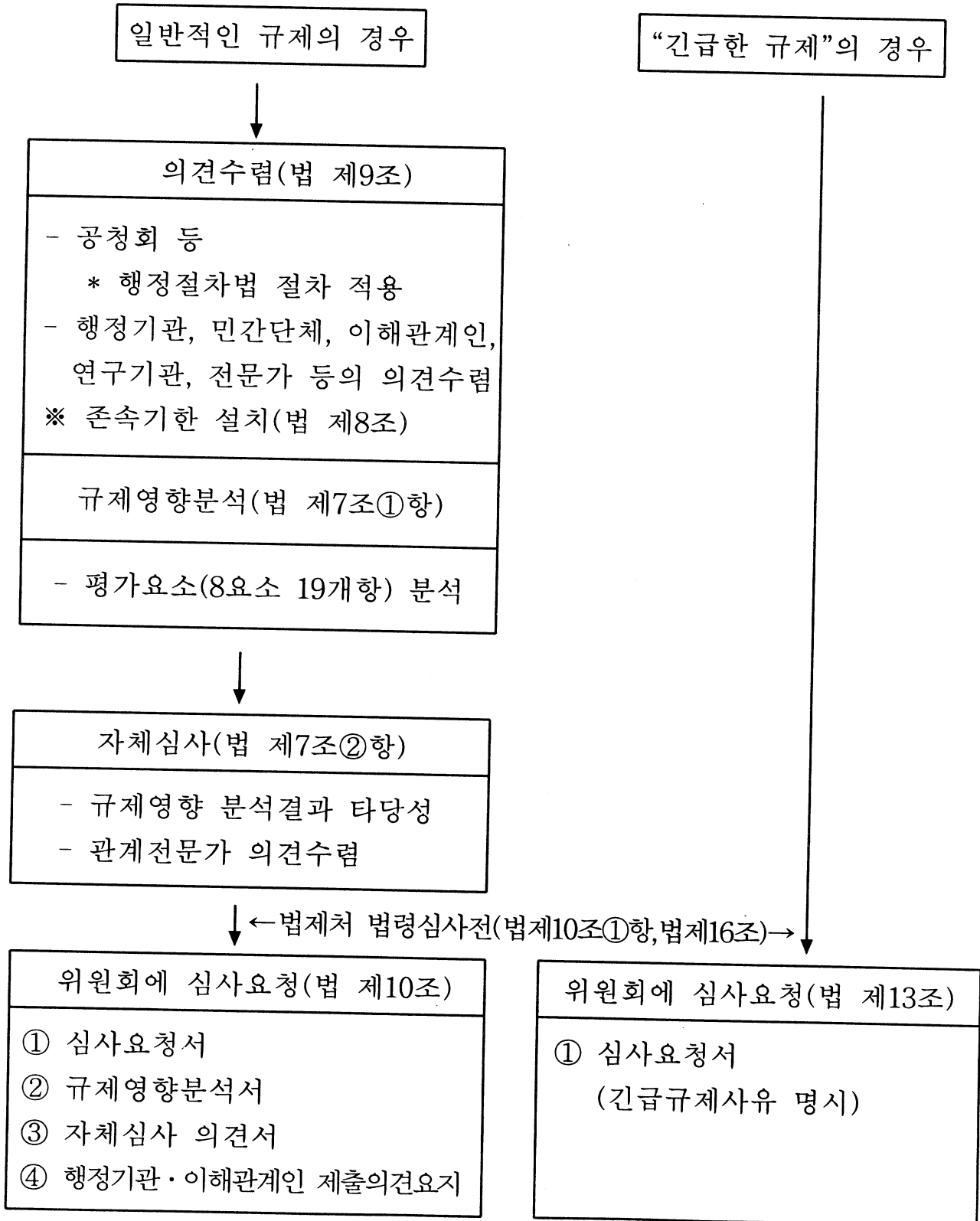
-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규제를 신설(강화)하지 못하게 하고, 위원회가 심사하여 규제의 신설(강화)을 철회하게 하거나 개선을 권고(법 제16조①항, 법 제14조①항)
- 법령안의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토록 함(법 제16조②항)

## 다.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제도 적용제외(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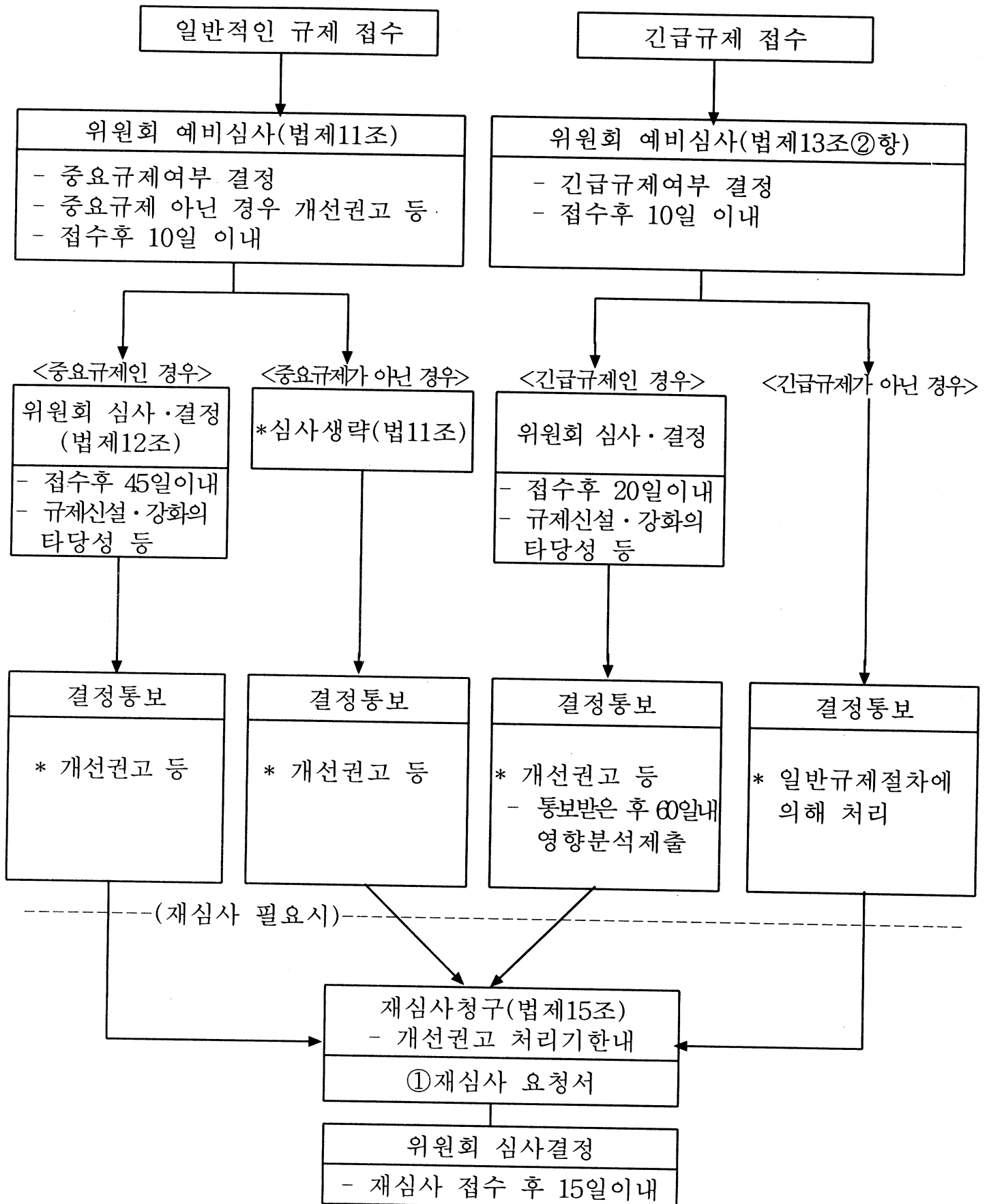
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등이 행하는 사무 등 법제3조제2항 및 영제3조에 의한 규제는 적용이 제외됨(법제3조②항, 영제3조)

## 2. 新設(強化)行政規制 審査業務節次圖

### < 중앙행정기관 >



## < 규제개혁위원회 >



## II. 規制影響分析 指針

### 1.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요

#### 가. 규제영향분석 의의 및 목적

- “규제영향분석”(Regulatory Impact Analysis)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·경제·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·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(법 제2조①항5호)
- 규제영향분석의 목적
  -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방지
  - 합리적인 규제수단과 대안의 탐색
  - 기존규제의 합리적 개선 유도

#### 나. 규제영향분석의 자체적인 실시 및 심사 책임 부여

- 규제영향분석의 작성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 또는 기존규제의 강화를 검토하는 각 부처가 작성하여, 그 타당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우선 심사토록 의무화(법 제7조)
  - 각 부처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
- 영향분석 실명제
  - 규제영향분석 작성에 관여한 국장·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(시행령 제6조 ④항)

#### 다. 규제영향분석 대상

- '98.6.1 이후의 신설규제, 기존규제중 강화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규제(법 제7조, 시행령부칙 제2조)
  - '98.6.1 이후 법제처 법령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규제부터 적용

**라.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: 8요소 19개 항(시행령 제6조)**

- 1)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
  - 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
  - ②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
  - ③ 규제의 목표 설정
- 2)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
  - ① 국민·기업·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
  - ②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
- 3)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
  - ①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
  - ②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
  - ③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
- 4)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
  - ① 규제의 경제·사회적 비용의 분석
  - ② 규제의 경제·사회적 편익의 분석
  - ③ 비용·편익의 비교 및 검토
- 5)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
  - 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
  - ②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
- 6)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
  - ①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·일관성·이해용이성
  - ②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
- 7) 행정기구·인력 및 예산의 소요
  - ①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·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
  - ②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
- 8)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·처리절차 등의 적정성
  - ①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
  - ②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

## 2. 규제영향분석 지침

### 가. 분석서 작성 기본지침

- 분석서 작성대상규제는 평가요소인 8요소 19개 항목에 대해 가급적 계량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빠짐없이 기술함을 원칙으로 함
  - 기존규제의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히 강화·기한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분석하지 말고 가급적 Zero Base(신설규제 차원)에서 각 평가요소별 분석이 되도록 하여야 함
- 작성대상규제를 “중요규제”와 “중요규제가 아닌 규제”로 구분하여
  - “중요규제”는 비용·편익분석등 영향분석을 담당공무원 1인의 형식적인 작성을 지양하고 분석팀 구성(Task Force)이나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(또는 용역)을 거치는 등 각 평가요소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
  - “중요규제가 아닌 규제”는 평가요소중 “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” 등의 분석에 있어 계량적인 분석에 따른 비용과다, 분석기간 장시간소요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술적인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, 또한 분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요소·항목은 일부 생략할 수 있음

## 나. 중요규제 여부의 분류

### < 중요규제의 기준 >

- ①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
- ②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
- ③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
- ④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

○ 중요규제 여부의 분류는 제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분류하되

- 1개이상의 기준에서 중요규제의 기준이내 일시 중요규제로 분류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고

- 규제영향의 비용규모 산정은 비용·편익분석 요령을 참조하되 예비적인 비용효과분석(간이적인 분석)으로 판단토록 함

○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를 분류하였을 경우 그 판단의 근거와 분류에 특정한 가정을 설정하였을 경우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분석서 작성을 생략한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함  
(분석서 개요란에 기술)

-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인적사항 및 의견내용을 함께 기재함

※ 중요규제의 기준적용을 잘못하였거나 그 기준적용의 정당성이 미흡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요규제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심사연기 또는 자료보완을 요구하게 됨



## <중요규제 여부 판단 예시>

- 일정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월 4시간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규제의 도입을 검토할 시
  - 비용부담항목 : 기업비용(피규제공장의 비용), 정부비용(교육경비) 등이 직접적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음
  - 이 경우 기업순응비용이 안전관리 담당자의 시간당 평균임금(10,000원 가정)×규제대상사업장(5만개 가정)×4시간=20억(월간 순응비용), 20억×12월=240억
- 중요규제로 분류
  - \* 여타 비용 항목 등은 100억이 크게 넘음으로 생략
- 5년주기의 자동차 정기검사제 도입 검토시
  - 자동차 보유대수(1,200만대 가정) ÷ 5년 = 240만대(명)로 연간 100만명 이상이 규제를 받게 되므로
- 중요규제로 분류
-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예시
  - 인·허가, 면허 등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진입제한 등이 발생하는 규제
  - 사업의 범위 또는 구역을 제약하거나 생산·판매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
  - 기존 인·허가 등의 규제에 있어 허가의 중요한 요건을 대폭 강화(추가)하는 경우
  -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등에 제약을 가할 소지가 큰 규제
-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과다 및 불합리한 규제 예시
  - 외국인 투자를 극히 제약할 가능성이 높은 규제
  - OECD등 국제적인 규제정도에 비추어 과다한 규제
  - WTO등 국제무역 및 투자규범에 저촉되어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규제

### 3.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

-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을 이용하여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시 서식변경 또는 별첨형식으로 기재하고 작성전에 별첨한 『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요령』을 충분히 숙지후 작성할 것

항 목	분석서 기재사항	작 성 방 법
I. 분석대상 규제개요	1. 규제사무명  2. 규제의 구분  3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4. 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  5. 영향분석의 구분 (중요규제여부) 및 분석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사요청한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</li> <li>○ 신설규제, 기존규제 강화, 존속기한 연장 인지를 구분</li> <li>○ 규제를 신설(강화)하려는 부처·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실·국장 및 과장급의 직책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</li> <li>○ 외부용역이 있는 경우 외부용역 관련자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한다</li> <li>○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등록단위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규제영향분석을 유사성격의 단위를 묶어 영향분석을 할 시 관련되는 규제수와 근거법조명(신설규제는 예상되는)을 기재한다</li> <li>○ 중요규제 여부를 구분하고 중요규제여부를 판단하게 된 근거를 기술하고</li> <li>○ 중요규제가 아닌 경우 분석서 작성을 생략하게 된 평가항목과 그 사유를 기술한다</li> <li>○ 중요규제여부의 판단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있을 경우 자문내용과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li> </ul>

항 목	분석서 기재사항	작성 방법
Ⅱ.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	6. 종전규제 및 신설(변경)규제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규제의 강화,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종전규제의 내용중 변경하려는(심사요청하는)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하고</li> <li>○ 신설규제의 경우 심사요청한 규제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기재한다</li> <li>* 심사요청한 규제내용과 영향분석 검토 대안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</li> </ul>
	1.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. 문제의 정의· 내용 및 발생 의 원인  나.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다. 규제의 목표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규제신설(강화)이 필요하게 된 문제를 그 성격과 크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정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그 문제발생의 위해도와 확률 등 제시</li> </ul> </li> <li>○ 그 문제의 발생원인을 직접적 원인 및 간접적 원인까지 충분히 분석 기술한다</li> <li>○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기술한다</li> <li>○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래상태(목표)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거나 일반적으로 목표를 정의하여서는 아니되며</li> <li>- 상위목표(일차적목표)와 하위목표(보조적, 이차적목표)를 구별하는등 가능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목표달성을 위해 가능한 대안(규제의 강도·수준)을 포괄적으로 함께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안중 일부 대안에 대해서만 비용편익 분석 등 평가요소별 분석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대안들을 기술하여야 한다</li> </ul> </li> </ul>

항 목	분석서 기재사항	작성 방법
	<p>2.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</p> <p>가.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필요성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제를 정의하였는가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심각한가?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?</li> <li>· 문제의 범위가 직접적인 관계는 물론 간접적인 관계까지 포괄하고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li>- 문제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였는가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과관계가 타당한가?</li> <li>· 여타의 이해관계자에게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충분히 자문등이 이루어졌는가?</li> </ul> </li> <li>-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목표를 제시하였는가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정부개입이 진정으로 필요함을 입증하였는가?</li> </ul> </li> <li>- 목표달성을 위해 경합하는 가능한 대안들을 적절히 검토하였는가?</li> </ul> <p>○ 관련기관의 자문·회합 등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반대하거나 손실을 입게될 단체(분야), 저항이 예상되는 단체명 등을 기술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규제에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조직이나 집단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</li> </ul>

항 목	분석서 기재사항	작성 방법
	나. 기술수준,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행가능성	<p>○ 해당규제 대안의 집행가능성을 기술적 수준, 행정적 여건(관련부처 협조 여부 등)에 비추어 검토 작성한다</p>
		<p>□ 실행가능성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반대집단을 자문 등을 통해 잘 규정하였는가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요한 집단을 모두 포괄하였는가?</li> <li>· 특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으나,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집단을 고려하였는가?</li> </ul> </li> <li>- 사안의 특성과 형평성있는 자문방법으로 규명되었는가?</li> <li>- 해당 규제의 정치적·기술적·행정적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?</li> </ul>
	<p>3.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 중복 여부</p> <p>가. 기존규제의 대체 여부</p>	<p>○ 규제목표를 달성하는데 규제를 신설·강화하는 것 보다 기존규제에 의존하는 것(무규제)이 타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 기술한다.</p>

항 목	분석서 기재사항	작성 방법
	<p>나. 규제의 다른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</p> <p>다.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</p> <p>라.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</p> <p>* 추가 항목</p>	<p>○ 기존규제(무규제)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규제보다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각각 검토 기술한다</p> <p>- 비규제 검토수단 : 정보제공 및 교육, 과세·보조금, 보험 및 책임규약, 행위 및 사업규약, 산업자율규제 등</p> <p>○ 유사한 규제 및 중복 여부를 관련부처의 협조 등의 방법을 통해 파악 작성한다</p> <p>○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또다른 규제를 낳을 가능성을 검토 기술한다</p> <p>□ 대체수단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여부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</p> <p>- 무규제 대안을 통한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?</p> <p>- 비규제 대안을 통한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?</p> <p>-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?</p> <p>-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은 없는가?</p>

항 목	분석서 기재사항	작성 방법
	<p>4.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</p> <p>가. 규제의 비용분석</p> <p>나. 규제의 편익분석</p> <p>다. 비용·편익의 비교 및 검토</p>	<p>※ 외부전문가의 용역인 경우 용역의 개요 (일시,수행자,결과요약 등)를 간략히 기술하고 결과를 별첨으로 첨부함</p> <p>○ 규제로 인하여 희생되는 가능한 항목들을 열거하고 각 비용의 부담자 규명, 비용측정 방법 결정, 측정지표의 가치추정 등을 통해 비용을 가급적 공통된 단위로 계량화 하여 제시하여야 한다</p> <p>○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문제의 감소나 개선 사항 등을 열거하고, 편익의 측정방법, 측정지표의 가치추정 등을 통해 가급적 계량화 하여 제시한다</p> <p>○ 규제목표 달성을 위해 추정된 편익과 비용을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교·검토한다</p> <p>□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간접적 또는 직접적 비용·편익의 요인들을 규명하였는가?</li> <li>-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를 결정하였는가?</li> <li>- 각각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측정지표를 결정하였는가?</li> <li>- 적절한 분석시점을 결정하였는가?</li> <li>- 무규제 대안 및 규제대안의 가치변화를 측정하였는가?</li> <li>- 영향요인들을 공통단위로 수렴시키는 측정수단을 결정하였는가?</li> </ul>

항 목	분석서 기재사항	작성 방법
	<p>5.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</p> <p>가.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</p> <p>나. 기업활동 저해 요소 포함 여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규제 대안과 규제대안간의 차이를 계산하였는가?</li> <li>-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적절한 신뢰구간을 부여하였는가?</li> <li>- 각각의 시간대별로 영향요인들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였는가?</li> <li>- 계량화 시키지 못한 영향요인들이 존재하는가?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처리방법을 결정하였는가?</li> <li>- 할인율을 결정하였는가?</li> <li>-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였는가?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채택한 가정과 전제의 명시</li> <li>· 화폐화되지 못한 비용과 편익의 내용과 성격의 기술</li> <li>· 화폐화되지 못한 비용과 편익의 고려</li> <li>· 복원불가능한 상황을 규제가 초래하는 경우의 고려</li> </ul> </li> </ul> <p>○ 규제로 인해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장애요인이 있는지, 가격담합의 소지는 없는지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 요인 등을 충분히 기술한다.</p> <p>○ 각 규제대안의 시행으로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기술한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무역거래 제한가능성, 국내·외 기업의 차별대우 여부, 해외기업이나 투자자의 국내투자의 저하 여부 등을 검토함</li> </ul>



항 목	분석서 기재사항	작 성 방 법
		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- 제시된 규제대안이 국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? - 제시된 규제대안이 혁신 및 경쟁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가? - 제시된 규제대안이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 기업들과 비교 분석하였는가?
	6. 규제내용의 객관성·명료성  가. 규제기준·절차의 명확성 등  나.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규제내용의 객관성·명료성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- 규제기준과 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기술하였는가? - 규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는가? - 제시된 존속기한이 타당성이 있는가?

항 목	분석서 기재사항	작성 방법
	<p>7. 행정기구·인력 및 예산의 소요</p> <p>가.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·인력·예산 판단</p> <p>나. 기존조직·인력·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</p>	<div data-bbox="726 510 1449 1272"> <p>○ 규제집행을 위해 소요되는 조직과 인력 및 소요 예산을 검토 작성한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정규제를 위한 정부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으로 입안비용, 집행비용(감시, 감독 조직, 비용 포함), 정부의 순응비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과소계상 하여서는 안됨</li> </ul> <p>○ 사용자 부담원칙의 적용가능성과 방법 등을 검토 작성한다</p> <p>○ 기존조직으로 집행과 감독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에도 희생되는 조직기능 및 타업무 축소에 대한 기회비용을 검토 작성한다</p> </div> <div data-bbox="726 1317 1449 1899"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기구·인력·예산 소요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광의의 행정비용을 입안비용과 집행비용 및 행정기관들의 순응비용으로 유형화 시켜 측정하였는가?</li> <li>- 사용자 부담원칙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? 만약 그렇다면 필요한 승인 절차는 어떠한가?</li> <li>- 사용자 부담원칙을 도입하였다면 그것의 간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였는가?</li> </ul> </div>

항 목	분석서 기재사항	작성 방법
	<p>8. 민원사무의 구비서류·처리절차 등의 적정성</p> <p>가.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</p> <p>나.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</p>	<p>○ 규제에 의한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을 기업의 표준적인 업무, 정보체계 및 회계절차, 기타 유사규제의 구비서류 및 소요기일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.</p> <p>○ 규제의 집행을 중앙행정기관(소속행정기관), 지방자치단체 위임, 협회·단체 등 위탁 등 적정한 집행기관과 그 처리절차(경유기관 등)을 검토 작성한다</p> <p>○ 규제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의 고려와 그 절차의 적정성을 작성한다</p>
	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민원사무 구비서류·처리절차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</p> <p>- 행정처리에 있어 대기비용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였는가? · 그 규모가 과대하지는 않은가?</p> <p>- 행정처리에 있어 중복비용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였는가? · 그 규모가 과대하지는 않은가?</p> <p>- 피규제자가 규제행정에 대하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 절차를 확보했는가?</p>



### Ⅲ. 部處別 自體審査 業務指針

#### 1. 자체심사기구 구성·운영

##### 가. 심사기구 구성 방향

-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회 형식의 심의기구를 구성하되,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외부전문가(이해관계자)를 참여토록 구성 (법 제7조②항 취지)
  - 부처내 기구성된 유사 위원회와 통합운영은 가능하나 관련 외부전문가·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참여시켜야 함
-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입안부서(실·국)가 아닌 기획관리실 등에서 담당토록 함

##### 나. 심사기구 구성·운영

- 명칭 : 규제심사위원회
  - 위원장 : 차관 또는 기획관리실장
  - 위 원 : 관련 실·국장 및 민간위원 일정수 이상
  - 간 사 : 법무담당관(또는 행정관리담당관)
    - \* 청의 경우는 차장 등으로 적절히 조정 구성
- 위원회의 내부방침으로 “중요규제”와 “중요규제가 아닌 규제”로 구분하여 참여 위원수 조정 및 위원장을 차관 또는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분리 구성·운영 가능

- 간사는 심사일정, 참여자 현황 및 발언요지, 주요 심사내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
- 필요시 위원회에 관련부처 관계자를 참여토록 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운영
- 심사내용
  - 입안부서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
    -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(Ⅱ-3)의 “각 요소별 점검사항”을 참조하여 심사
  - 규제 신설(강화)에 대한 규제 범위·대상·존속기한 등에 대한 부처의 심사의견 결정

## 2. 심사절차

- 입안부서(실·국)에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구비하여 자체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
  - 심사대상 규제내용, 규제영향분석서, 행정기관·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
- 심의대상 규제를 중요규제와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의 심사절차·정도를 각각 달리 할 수는 있으나
  - 중요규제가 형식적 심사가 되지 않게 운영하여야 하며 중요 규제가 아닌 규제도 심사절차 자체가 생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입안부서에서는 자체심사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기초로 하여 중앙심사기구(규제개혁위원회)에 요청할 자체안을 결정

### 3. 자체심사의견서 작성·제출

#### 가. 자체심사의견서 제출

- 자체심사기구 주관부서(간사)는 심사위원회의 회의의 기록내용 등을 기초로 하여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
- 입안부서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첨부하여 제출되도록 하여야 함

#### 나. 자체심사의견서 작성 방법

- 자체심사의견서(별도양식 없음)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함
  - ① 규제명
  - ② 자체심사 일시 및 참여자(기구) 내용
  - ③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
  - ④ 규제신설(강화)에 대한 종합심사의견
    - 규제의 범위, 방법에 대한 의견 등
  - ⑤ 심사참여자의 주요 이견(요약)
    - 외부전문가 및 참여자의 주요 이견(성명 기입)
  - ⑥ 자체심사기구(위원회)에서 결정한 규제 범위·방법 등 내용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요청한 내용이 다를 경우 그 사유 및 변경내용 등

## 규제영향 분석서

### I.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

1. 규제사무명		2. 구 분			
		신 설		강 화	존속기한 연 장
3.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	※ 소관 부처·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·성명 기재				
4. 근거법령명 등	법-시행령-규칙-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명 등 조·항 기재	관련규제수			
5.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					
6. 종전규제 및 신설 (변경)규제의 내용					

### II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※ 평가요소 順(8요소 19개항)으로 작성

### III. 기타 기재사항

1. 사후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
2. 기타 참고사항